

2013 지방7급 행정학 기출문제

담당 : 방성은 교수(월비스고시학원 행정학 전임)

1. 정부실패 및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 ① 내부성 문제는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 ②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실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③ 뉴거버넌스적 접근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협력을 중시한다.
- ④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주의 책임성을 제고한다.

해설 : ① 내부성은 내부목표와 외부목표가 괴리되고 국민을 위한 외부목표보다 조직을 위한 내부목표를 중시하는 현상으로서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④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은 행정의 시장화를 강조하므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지만 민주성, 공공성, 책임성을 저하시킨다.(2014 비타민행정학 163페이지) 답 : ④

(2)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 2014 비타민행정학 163페이지

- ① 지나친 시장주의와 공행정의 특수성 무시 :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하여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하여(정치행정 이원론),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정부에 기업 경영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이식한다.
- ② 공행정의 가치이념 훼손 : 신공공관리론은 가격체제와 경쟁원리에 의한 능률주의에 입각한 것으로서 공익성, 사회정의, 형평성에 반할 수 있으며 모든 계층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 ⑦ 책임성의 문제 : 책임성을 계약주체나 상사와의 관계로 좁게 해석하여 정치적 책임성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권리의 주체인 정치적 시민이 아닌, 소비의 주체인 경제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2.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국에서는 의무경쟁입찰제도가 최고가치 경쟁으로 전환되었다.
- ② 사바스(E.S.Savas)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허가·보조금 등은 지방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부문이 생산을 담당하는 공급유형에 속한다.
- ③ 니스카넨(W.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의 행태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커질 수 있다.
- ④ 시민공동생산 논의는 시민과 지역주민을 정규생산자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해설 : ① 1980년에 도입된 영국의 의무적 경쟁입찰제도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민관경쟁입찰제도로써 강제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0년부터 지방정부에게 입찰여부에 대한 판단여지를 부여하는 최고가치(best value)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④ 공동생산은 시민이 정부의 공공서비스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로서 시민과 지역주민이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공공부문의 프로슈밍(prosuming)이다. 그러나 시민과 지역주민을 정규생산자로 파악하지는 않는다.(2014 비타민행정학 66페이지) 답: ④

3. 롤스(J.Rawls)의 정의론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 ② 최대극대화의 원리
- ③ 차등의 원리
- ④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해설 : 롤스(J. Rawls)는 정의론(1971)에서 정의를 공평으로 풀이하면서 배분적 정의가 평등원칙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정의(Justice)란 공정한 배경 속에서 합리적 계약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것이며 그렇게 도출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때만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최대극대화가 아니라 최소극대화(Maximin) 원리이다. 최소극대화란 극빈층의 이익이 가장 크게 되도록 차등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2014 비타민행정학 88페이지) 답: ②

- ㉔ 롤스의 제1원리 [정치적 측면 : 동등한 자유의 원리(Equal Liberty Principle,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 :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를 누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유재산을 가질 자유 등
- ㉕ 롤스의 제2원리 [사회적·경제적 측면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조정원리]
- ㉕ 기회균등의 원리(Equal Opportunity Principle) : 모든 직위와 직무는 공개되어야 하는 등 능력 발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직위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 기회의 공평(공평한 기회 하에서 발휘된 능력에 맞는 대우)
- ㉕ 차등조정 원리(Difference Principle) : 기회균등의 원리가 전제되고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에 대한 시정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의 이익이 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최소극대화의 원리, Maximin). 차등의 원리는 사회적 형평이란 이름으로 행정에 적용되고 있다. ⇨ 결과의 공평(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득재분배)

4.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제도주의는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 ②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변수일 수도 있다.
-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행위자의 선호는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holism) 입장을 취하며 주로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해설 :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은 제도의 '개인행동에의 제약성'에 초점을 두는 신제도론의 주류에서 약간 벗어나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신제도론과의 조화를 시도한다. 따라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은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형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의 변화로 개인의 선택이나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는 등 제도의 영향력을 인정한다. ③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서는 선호의 외생성을 가정한다. 즉 인간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고정되고 일관적·안정적 선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도는 선호형성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선호형성은 설명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반면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선호의 내생성을 가정한다. (2014 비타민행정학 152페이지) 답: ③

- (2)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 - 2014 비타민행정학 152페이지
- ② 주요 특징
- ㉕ 외생적 선호와 전략적 행동 : 인간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고정되고 일관적·안정적 선호를 가지고 있다. 즉 제도는 선호형성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선호형성은 설명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의 개인은 이미 주어진 선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자발적으로 제도를 형성하는 전략적 행동을 한다. ⇨ 방법론적 개체주의, 연역적 접근

5. 신공공서비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주의 가치를 추구한다.
- ② 고객이 아닌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
- ③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 ④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해설 :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등장한 신공공서비스론은 시장주의에 반발하여 정부의 소유주인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며 기존 이론들이 강조 하던 행정의 생산성·효과성 등에 밀려 소홀히 여겨왔던 시민정신, 참여의식, 공익, 공공책임성 등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들을 중시하고 민주주의정신을 새롭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규범적 이론이다.(2014 비타미행정학 184페이지). 답: ①

2.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 배경 - 2014 비타미행정학 184페이지
(1) 정통이론의 문제점 극복 : 정통 대의민주주의이론이 내세우는 통제모형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두되었다.
(2) 시장주의 이론의 문제점 극복 : 공공선택이론과 이의 영향을 받은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와 시민의 객체화·고객화 등에 대하여 반발하고 반작용의 흐름으로서 대두되었다.

6.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표준운영절차나 상례적 절차를 확립하여 원활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 ② 부나 권리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포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이다.
 - ③ 누진세, 사회보장, 사회간접자본정책 등이 그 예이다.
 - ④ 정책참여자들 간 이해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해설 :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계층 간 치열한 갈등이 전개되고 저항이 많아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원활한 집행이 곤란하다. 소득세의 누진세율, 특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영세민취로사업, 임대주택건설, 저소득층 세액감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③ 사회간접자본(SOC) 정책은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다.(2014 비타미행정학 192페이지) 답: ③

① 분배정책(distribute policy)
① 의의 : 분배정책(分配政策)은 정부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해 주는 정책이다.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산출 제공하거나 사회전체에 유익하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착수될 수 없는 성질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부문의 활동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여 활동을 증진시키는 정책이다.
ex) 도로·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 공원·박물관·미술관 건설,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 정부의 수출정보 제공,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주택자금 대출, 국유지 불하(拂下), 택지분양,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 사업,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등

7. 하이예스(M. Hayes)는 정책결정 상황을 참여자들 간 목표 합의여부, 수단적 지식 합의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 정책결정 상황의 분류

	목표 갈등	목표 합의
수단적 지식 갈등	I	II
수단적 지식 합의	III	IV

- ① 상황 I에서는 점증주의적 결정이 불가피하며, 점증적이지 않은 대안은 입법과정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 ② 상황 II에서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모형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
- ③ 상황 III에서는 수단에 대한 합의로 인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상황 IV에서는 비교적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해설 : 수단은 합의가 되어 있으나 목표는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 결정이 불가능하고 타협전략이 적용된다. 합리모형은 먼저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는데서 출발하므로 목표갈등 상황에서는 합리적 결정이 불가능하다. 비타민기본서에 제시된 Daft모형의 상황적응모형(2014년 249페이지)에서는 하위부서 간 협상과 타협을 진행하는 회사(연합)모형이 적합한데, 이와 유사하다. 답: ③

* 정책결정 상황의 분류(Hayes)

구분	목표의 갈등	목표의 합의
수단적 지식의 갈등	정상적 점증주의 영역 (1)	순수한 지식기반의 문제 (2)
수단적 지식의 합의	순수한 가치갈등의 문제 (3)	합리적 의사결정의 영역 (4)

(1) 목표와 수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점증주의 전략이 불가피하다.

(2) 목표는 합의가 되어 있으나 수단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확실성에 대비한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적용된다.

(3) 수단은 합의가 되어 있으나 목표는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리적 결정이 불가능하고 타협전략이 적용된다.

(4) 목표와 수단에 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있으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8. 립스키(M.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는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 ② 일선관료들은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진다.
- ③ 일선관료들은 모호하고 대립적인 기대들이 존재하는 업무 환경 때문에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④ 일선관료들의 재량권이 부족하여 업무가 지연된다.

해설 : 일선관료는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상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2014 비타민행정학 298페이지) 답 : ④

(2) 정책집행에서의 일선관료의 위치 - 2014 비타민행정학 298페이지

① 일선관료의 재량권

㉠ 일선관료의 업무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자신이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 때문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대상집단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또한 크다.

㉡ 일선관료들은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신속성과 인간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재량권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9. 베버(M.Weber)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층제에서 근무하는 관료는 봉사 대상인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 ② 관료는 'Sine ira et studio'의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관료를 승진시킬 때에는 근무연한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은 관료라고 볼 수 없다.

해설 : ① 계층제(hierarchy)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수직적 계층을 설정하고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한 구조로서 계층 간에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고 명령복종과 지휘감독체계를 확립한 구조이다. 관료제는 계층제를 기반으로 한다. 관료제는 계층제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료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상관에게 계

충적 책임을 진다. ② 'Sine ira et studio'는 라틴어로서 개인의 감정이나 편견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개인성, 몰주관성을 의미한다.(2014 비타민행정학 341, 395페이지) 답 : ①

10. 스마트사회 및 스마트정부의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유연성 · 창의성 · 인간중심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이다.
- ②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고된다.
- ④ 재난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추구한다.

해설 : 이 문제에서 스마트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모든 인공물에 컴퓨터 기능을 내장하여 이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① 유비쿼터스컴퓨팅은 인간을 복잡하고 불편한 컴퓨터작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중심적 정보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킨다. ② 유비쿼터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환경과 선호도에 따라서 휴대전화나 PDA 등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개인화·지능화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부이다.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유비쿼터스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 3.0’ 정책을 제시하였다. ③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종래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수행방식을 의미한다. 스마트 워크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영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원격근무, 원거리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재택근무 등이 포함된다. ④는 이와 무관하다.(2014 비타민행정학 415, 480페이지) 답: ④

*** 정부 3.0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구현 정책으로서 일방향인 정부 1.0과 양방향인 2.0을 넘어 융합형 행정인 창조정부3.0 구현을 목표로 세우고 공공정보 개방 확대로 신정부 구현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유능한 정부 구현 정부와 민간협업 확대 정부 지식경영 시스템 구축·활용으로 정책수행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운영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한 정부의 새로운 모습이다.**

11.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 ① 관료제 모형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 ② 조직 능력보다는 개인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③ 능률성보다는 문제해결을 필수적 가치로 추구한다.
- ④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해설 : 학습조직은 정보지식사회의 대표적인 유기적 조직모형으로서, 조직 전체 차원에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모든 구성원이 팀을 기본단위로 하여 끊임없이 함께 배워 나가는 자기변혁적 조직이다. 학습조직은 개인학습으로 얻은 지식·정보·기술·경험 등이 팀 학습을 통하여 소규모 조직단위의 집합적 학습으로 바뀐 후, 전파 및 공유 활동을 통해 조직학습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적 사고를 중시한다. 따라서 부분보다는 전체가 중요하며 부서 간 경계가 최소화되며 공동체정신, 공동생산, 상호호혜(구성원 상호 간의 동정과 지원), 협력, 일체감 등을 강조하는 강력한 조직문화를 지향한다.(2014 비타민행정학 494페이지) 답: ②

12. 직위분류제 분류 구조와 관련된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해설 : 대표관료제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소극적 대표)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적극적 대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대두되었다. 가. 대표관료제는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직에 들어오게 하는 제도이므로 맞는 지문이다. 나. 공무원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는 제도는 대표관료제가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다. 여기서 기회균등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기회균등이므로 형식적인 기회균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균등이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라. 대표관료제는 정당정치 발달과 무관하며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은 엽관제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마.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다양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맞는 지문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551~553) 답: ㉔

14. 다면평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② 작업집단의 팀워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자를 행정기관 내부자에 국한한다.
- ④ 피평가자를 업무목표의 성취보다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급급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

해설 : 다면평가제는 전통적인 상급자 평가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개인을 평가할 때 상사·동료·부하·고객 등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방면에서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360° 평정법, 집단평정법, 복수평정법이라고도 한다. ① 다면평가는 계층적 책임만을 강조하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국민의 입장도 반영한다. ③ 내부자에 국한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④ 다면평가는 능력보다는 인기위주로 변질된 가능성이 많다.(2014 비타민행정학 569페이지) 답 : ㉓

15. 행정윤리 및 행정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 ②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조직의 불법행위를 언론이나 국회 등 외부에 알린 조직구성원을 보호한다.
- ③ 옴부즈만(ombudsman) - 행정이 잘못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준다.
- ④ 백지신탁 - 4급 이상 공무원은 이해의 충돌을 막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해설 : 백지신탁제(白紙信託制, blind trust)란 공직자가 재임기간 동안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대리인에게 위탁하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사전적 통제제도로서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였다(2005 시행). 주식백지신탁제는 공직자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제도로서 재산공개대상 공무원(1급 이상)이 적용을 받는다.(2014 비타민행정학 627페이지) 답: ㉔

16. 예산 통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닌 것은?

- ① 특별회계 ② 목적세
- ③ 계속비 ④ 수입대체경비

해설 : 통일성 원칙은 모든 세입은 하나의 국고(國庫)에 통합되고 모든 세출은 그 국고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어떤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지역지원시설세 등), 초과수입의 사용(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계속비는 계속해서 연도를 경과하여 지출되므로 한정성원칙(목적외 사용금지, 초과지출금지, 연도경과금지)의 예외이

다.(2014 비타민행정학 668페이지) 답: ③

17. 발생주의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자산·부채·수입·지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회계기법이다.
- ② 미지급금·부채성충당금 등을 포함하여 부채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 ③ 산출에 대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권화된 조직의 자율과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 ④ 이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현금흐름보고서를 통해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채를 과소평가하는 현금주의회계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해설 :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수익이 획득되거나 지출 또는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즉, 현금으로 회수될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수익으로 인식하고(징수결정시점), 현금을 지불할 채무가 발생하였다면 비용으로 인식한다(채무확정시점). ① 발생주의 자체는 자산 부채 자본을 인식하여 기록하는 회계방식은 아니지만 복식부기와 함께 사용하므로 자산 부채 자본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아닌, 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여 기록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수입과 지출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므로 현금의 유출과 유입시 기록하는 현금주의에서 정확히 인식한다. ② 부채성충당금은 장래의 특정의 비용인 지출의 발생이 확실히 예상되고 당해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당기에 발생하는 경우에 설정되는 충당금으로 퇴직급여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등이 이에 속한다. ④ 현금주의는 부채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부채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반면 발생주의는 부채를 정확히 인식한다.(2014 비타민행정학 658페이지) 답: ①

18.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회계 설립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정부 특별회계의 일례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있다.
-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특별회계 대상이다.
- ④ 중앙정부의 기업특별회계에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 우편사업·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특별회계가 있다.

해설 : ②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학예에 대한 경비를 따로 계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설치하는 특별회계이다.(2014 비타민행정학 909페이지) 답: ②

③ 교육자치 기타 중요 사항 - 2014 비타민행정학 909페이지

- ㉠ 교육감파 교육위원의 선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주민직선제로 전환
- ㉡ 교육특별회계 설치 :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계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함.

19.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참여의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
- ② 주민의 감사 청구
- ③ 주민총회
- ④ 주민소송

해설 :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 주민발안(주민조례제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을 규

정하고 있다. 주민총회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2014 비타민행정학 864페이지) 답: ③

20. 성과중심주의에 입각한 성과관리의 효용 또는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 ① 목표성취도에 유인기제를 연결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자들이 성과목표를 매우 높게 설정하는 행동 경향을 보인다.
- ② 관료적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한다.
-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압력단체들의 개입 때문에 성과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되기 어렵다.
- ④ 업무수행과 성과 사이에 개입하는 변수들이 많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해설 : 목표에 대한 성과측정 기준이 개발되기 어렵고 성과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므로 성과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2014 비타민행정학 728페이지) 답: ①